

남구 전략공천 고민 깊어가는 민주당

세대 교체·지역연고·명분·인지도 놓고 저울질 이번주 재보선 후보 확정 8~12일 정책발표회

광주 남구와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충북 충주 등 재·보선 지역에 대해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이 5일부터 이들 선거구에 대한 공천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재·보선 전략 공천 지역에 대한 후보자 자격 등을 논의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각 지역구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한 각종 자료와 실사 보고를 받고 추후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밤 9시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략공천을 논의하는 등 빠르면 7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재·보선 후보를 모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 남구의 경우 후보 선정 후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후보 등록일인 13일 직전에 공천자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결정한 것이 없고 내일 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광주 남구의 경우 7~8명의 후보에 대한 각종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남구와 관련, 지역구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남구의 경우 재·보궐선거 개념에서 남구만을 지역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광주 전체를 지역구로 봐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또 당헌·당규 상의 당 기여도의 의미도 남구라는 지역구에 한정된 의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당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논

의했다”고 말했다.

거론되는 후보 중 지역구를 바꿔 공천을 노리는 후보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후보 압축설’에 대해 “오늘 처음 논의를 시작했으며 후보 압축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세신과 세대 교체, 무난한 공천의 필요성, 지역연고·명분과 인지도 사이의 고민 등이 광주 남구 전략공천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28 재보선 지역인 충남 천안을과 강원 원주 후보로 여론조사 경선에서 우위를 보인 박완주 천안을 지역위원장과 박우순 원주 지역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천안을과 원주 후보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금주 내로 공천을 마무리하고 8~12일 재보선 지역을 돌면서 정책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5일 오전 천안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충남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구 보선 특정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광주·전남 17개 여성단체 이윤정 후보 공천 요구 문화·학계·시민사회계 임내현 변호사 지지 성명

민주당이 7·28 재보궐 선거에 대한 공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광주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학계 등 각 단체 등이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각 후보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중앙당 전략공천을 의식해서인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앙당을 상대로 공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후보를

비난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희성 한국어성지도자연학 광주·전남회장과 안영자 전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광주·전남 17개 여성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을 방문해 7·28 남구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여성인 이윤정 지역위원장을 공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의 정

체성과 역사성을 겸비하고 참신성을 더할 수 있는 여성계 후보를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예비후보는 또 이날 “지금까지 남구민과 대화 한번 해본 적 없이 오로지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 보겠다’는 사람들이 중앙당에 줄을 서고 있다”며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홍보도 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일부 후보를 꼬집었다.

조상열 대동문화재단회장 등 문화계 인사 23명과 시민사회계 160명, 학계인사 22명 등도 이날 임내현 변호

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남구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개혁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인물이 되어야 한다”면서 “임내현 변호사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병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 노령연금 급여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채 예비후보도 이날 “열악한 남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사적공원과 양립동 일대 아시아 문화교류사업, 대촌·칠석동 아시아 전승 문화교류권 사업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회 때 아닌 ‘열공’ 바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선거 앞두고 민노·교육의원 표심잡기 정책·논리 학습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때 아닌 ‘학습 열기’로 뜨겁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민노당과 교육의원들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표심을 잡을 ‘맞춤형 논리개발’을 위해서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장 후보로 나선 김재무(50·광양 2선거구), 이호균(48·목포 2), 홍이식(52·화순 2) 의원은 6일 구례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3명 의원과 무소속 2명 등 5명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의장 후보들은 1시간 간격으로 예정된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동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향후 의회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한 의장 후보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공감을 얻을만한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들은 앞서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한나라당, 무소속 의원 등 7명의 만남에서 ‘비민주당 소속 교섭단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데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등 ‘까다로운’ 면접 시험을 치렀다.

이호균 의원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민노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는 민노당 정책에 대해, 교육의원 초청에는 교육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세 후보는 지난주 장흥에서 열린 도의원 초선의원 모임에도 달려가 지지를 호소했다.

의장 후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선거가 3파전으로 전개되면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혼전 양상이 예상돼 한 표가 아쉬운데다, 다양한 인적 구성에 변화와 개혁 분위기까지 일면서 과거와 달리 식당이나 술집 선거운동으로는 표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이식 의원은 “9대 의회에서 초선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의회와 의장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아는 게 중요해 당선자 명부와 연락처를 해질 정도로 뒤적이면서 접촉 횟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인적 구성이 과거보다 다양해지면서 의장단 선거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9일 제9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7명과 특별위원장 2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당 지도적 위치에 있던 분이 선동...”

민주 주류, 정동영 의원에 직격탄

민주당 주류가 5일 비주류의 핵심인 정동영 의원을 정면 공격하면서 ‘반(反)정세균 연대’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주류 측 핵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의원이 쇄신연대 출범식에서 “민주당 세 글자를 빼고 동맹 뒤집어엮자”고 말한데 대해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분이 으로서 과도한 해석을 하고 선동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되는 말은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쇄신연대 출범식에서 “한국 정당사에서 당내 문제로 집회를 한 역사는 없다”고 평가 절하했고, 비주류의 당내 혁신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선이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의 주장이 전대물을 둘러싼 것이 돼버렸는데, (당권

투쟁으로) 의심받을 만한 주장을 한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도 비주류의 공세를 외면하며 이날 충남 천안을 찾아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7·28 재보선 선거 지휘 행보에 진력했다.

정 대표는 “재보선을 거당적으로 잘 치러서 꼭 승리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결속을 강조했다.

한편, 계파 간 조정자를 자임한 박지원 원내대표도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에도 제1야당은 민주당이 아닌 ‘친박당’이었다”는 정동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 “당내 활발한 논의는 생산적이지만, 어떻게 성과까지 올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느라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안함 국조 요구서

野 4당, 국회 제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5일 전안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은 국정 요구서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왔으나 사건의 원인, 초기 보고, 조사결과 발표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대응 과정의 적절성 여부, 군의 기강해이 및 안보무능 사태 점검 등을 통해 대외적 책임을 엄중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은 ▲전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규명 ▲전안함 침몰 사건 전후의 군사 대비 태세, 사건 초기 상황 보고 및 전파 체계의 문제점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검증 ▲정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국조를 위해 야당 동수의 20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